

생산일 : 2000.11.28

보도참고자료

주요내용

☐ 진념 재정경제부장관은 『2000년도 및 2001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』에 대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심의과정에서

○ 공적자금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을 별첨과 같이 밝혔음

별첨 : 공적자금 제도개선 사항

자료 생산과 :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(500-5341~3)
공보관실(500-5018)

공적자금 제도 개선 사항

	투입제도	사후관리제도	회수제도	관리체계
현행	<input type="checkbox"/> 투입과정에서 예보의 적극적인 참여 미비 ①서면의결 위주로 운영 ②실사자료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③최적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을 공개하지 않음	<input type="checkbox"/> 공적자금을 일시에 지원하여 사후책임추궁에 한계가 있음 <input type="checkbox"/> MOU의 지속력이 약함 ○MOU내용에 노조동의 등이 없어 강제력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MOU 비공개하고 있음(계약적인 내용만 공개) <input type="checkbox"/> 예보가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이사 선임에 관한 주주권 미행사	<input type="checkbox"/> 적절한 회수여부 점검 체계가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예보의 부실책임 추궁에 한계 ○예보·금감원의 고발후 검찰의 재조사에 따라 원활한 부실책임추궁에 미흡 <input type="checkbox"/> 신속하고 효율적인 파산절차 진행에 예로 ①법원에서 변호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 관행 ②파산재단의 자산 매각시 감사위원 등의 동의 절차로 신속한 파산 종료 곤란	<input type="checkbox"/> 공적자금 투입원칙에 법률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음 <input type="checkbox"/> 공적자금위원회의 구성을 추천(대통령 훈령) ①심의기관으로서 공적자금위원회 ②12인(정부5인, 민간7인) ③사무국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국회에 수사로 운용상화를 보고
개선	<input type="checkbox"/> 예보 운영위의 심사기능 강화(자금지원방안을 독립적으로 제점토) ①일정금액이상 투입시 반드시 운영위원회 소집하여 토론후 결정 ②금감위 실사자료를 예보에 송부토록 의무화하고 예보는 이를 다시 검증(또는 실사과정에서 예보가 공동참여) ③금감위는 자금지원 요청내용에 최적대안이라는 소명자료 제출-예보는 최적대안에 입각한 자금 지원 결정이라는 근거를 문서화	<input type="checkbox"/> 분할지원(Tranche)방식으로 투입 ○MOU체결시 총 지원한도를 명시하고 여러개의 Tranche로 나누어 지원 •Tranche별로 이행조건을 부여 ○이행조건 미달시 자금지원 중단 등 제재 •경영상 문제, 우량금융기관으로의 회생 등을 통한 구조조정 등 <input type="checkbox"/> MOU 내용의 표준화 및 그 내용을 공개하여 지속력 강화 ○MOU내용에 포함될 필수 사항 •주요 재무비율 목표, 목표 미달시 임금동결 등 목표달성을 위한 실행 수단, 노조동의서 등 <input type="checkbox"/> 예보의 이사선임권 행사 •사외이사 중 일부를 예보 직원 또는 예보가 지명하는 자로 선임	<input type="checkbox"/> 공적자금 회수에 관한 점검 체계 구축 ○"매각심사소위"를 두어 회수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고 주식매각전략을 수립 •적시성(timing), 회적가격(due pricing)으로 회수 하겠다는 것 점검 <input type="checkbox"/> 예보·금감원에 감사팀을 파견하여 부실책임추궁 기능을 강화(법무부와 협의 필요) •파견된 감사팀이 예보등에 법률자문역할 수행 <input type="checkbox"/> 부실기업에 대한 조사권을 예보에 부여 (정부가 제출한 예보법 개정안에 기포함) <input type="checkbox"/> 신속한 파산절차 추진 ①예보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의무화 ②예보가 파산관재인으로서 자산을 매각할 경우 감사위원 등의 또는 법원의 허가를 배제	<input type="checkbox"/> 공적자금 투입 원칙 명문화 •최소비용의 원칙, 손실분담, 지구노력, 전체 등 ※ 최소비용의 원칙은 정부가 제출한 예보법 개정안에 기포함 <input type="checkbox"/>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위상을 강화 ○심의기관이면서 공적자금의 회수에 관하여는 심의·조정기관 ○15인(정부 6인, 민간 9인) •정부 : 재정·예산·금감위 장관, 예보·KAMCO사장 + 한은총재 •민간 : 임명, 행정, 사법부 추천 각 3인 ③사무국 설치 •위원회의 업무를 보좌(사후관리, 주식 매각 관련) <input type="checkbox"/> 국회 정기 보고(분기별)